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불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담당 : 장범식 상근변호사 02-522-7284)

제 목 [보도협조요청]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 개최

날 짜 2026. 03. 03.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기자설명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일시 장소 : 3. 4.(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는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1월 12일 1차 입법예고했던 법안에 시민사회와 국회의 거센 비판이 일자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한 것이지만, 여전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에 불과한 개악안입니다.
- 재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축소하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서 보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1차 입법예고안의 독소 조항을 일부 제거한 수준입니다. 1차 입법예고안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수많은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검찰개혁 취지는 외면했으며, 기존 검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잔존합니다.
-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2/22)해 내부개혁 목소리마저 봉쇄하고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입법예고 기간을 단 2일만 두어, 실질적으로 재입법예고안을 공론화하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입법예고된 법안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 본령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정 사항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같이’ 그친 중수청·공소청법안 -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 일시 장소 : 2026. 03. 04. (수) 14: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규탄 발언 (정부안 마련~재입법예고 절차적 불투명성 문제 규탄) /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 규탄 발언 (정부의 안이한 인식, 수사-기소 분리 이해 부족 등 규탄)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중수청 법안의 문제와 수정사항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공소청 법안의 문제와 수정사항 /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변 사법센터(02-522-728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